

# 외환위기극복 이후의 신산업정책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9월 30일(목)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산업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최근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본 지에서는 요약본을 게재하였다. (편집자주)

## I. 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기업자세

### 1. 최근의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 가. 대외 여건의 변화

최근 엔/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되었던 120엔이 무너지면서 엔화강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이는 「일본경제회복」과 「미국경제하강」이라는 양국의 경제 기초여건에 대한 해석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아직은 일본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국면 진입과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 국면 진입이라는 경제 기초여건이 뚜렷하지 않아 현재의 엔고상황은 그 기초가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의 엔고가 일본과의 경합상품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다소 기여할 것이나 지나친 기대는 곤란하며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엔고의 수출가격 전가율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최근 자동차, LCD 등의 수출호조가 근본적으로 품질에 대한 해외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상승한 데 기인함과 같이 우리 상품의 품질 경쟁력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수출 증대가 어렵다.

또한 금년초 배럴당 10달러까지 하락하였던 국제유가(Dubai)는 산유국의 감산조치(4월)이후 계속 상승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의 OPEC의 감산연장 결의 등으로 고유가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나. 우리 경제의 모습

(1) 우리 경제는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3가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

IMF이후 한때 투자부적격 국가라는 낙인마저 찍혀야 했으나 이제는 투자적격 국가로서 대외신뢰도를 회복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우리 채권의 가산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IMF위기 극복과정은 우리가 위기상황에서 더욱 강해지고, 우리 모두에게 「하면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이 재정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설비투자과 수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선순환 경제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2) 최근의 국내경기는 민간소비 뿐 아니라 설비투자 및 산업생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세는 경제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금리·환율·임금 등 주요 경제변수와 엔고 등 국제경제여건이 기업에 유리한 경영여건으로 작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조건은 언제든 지 바뀔 수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산업, 무역 및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의 구

## 정책

조로는 향후 경기순환국면의 반전시 무역적자의 재발 및 경기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기여건의 일시적인 유·불리 여부에 집착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대응능력 배양에 주력해야 한다.

### 2. 우리 기업의 대응자세

#### (1) 기업이 당장 해야 할 일 5가지

- ① 독자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력만이 생존을 보장하며,
  - 최고경쟁자는 공장보다 연구소를 자주 방문해야 하며,
  - 엔고, 세계경영 호황 등에 따른 수익을 미래성장 부문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지식역량의 강화와 인적자본의 확충
  - 21세기 지식·기술경쟁시대에는 창조적인 지식역량을 가진 인적자본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등장할 것이며
  -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3~4개 이상의 Head Hunting 회사를 가까이 두어야 함은 물론
  - 기존인력의 지식역량 배가 및 새로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③ 핵심역량의 집중화 및 세계 우수기업과의 Network 확보
  -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는 「분야의 다양성」보다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능력의 집중화」가 관건이며
  - 이를 바탕으로 세계우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Network 경쟁력」을 확보해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 ④ 경기의 저점에서 생존할 수 없는 사업부문은 과감히 정리

■ 지금까지 우리기업은 경기호황시 생존하고 경기저점시에는 정부의 보호·지원에 의존하여 온 경향이 있다. GF의 책 웰치회장은 「2위 이내에 들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1981년 취임한 이후 지속적인 기업경역혁신을 추진하여 경쟁자의 추월을 따돌리고 수익은 4배, 주가는 30배로 증가시켰다.

■ 한편, 글로벌 환경으로의 진전은 외형 위주의 경영에 수반하는 외환위험, 금리위험 등 경영위험을 증폭시키므로 외형확대 경쟁보다는 수익성에 기초한 경영이 필요하다. IMF위기는 이러한 외형위주 경영의 위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⑤ 에너지 절약형 설비투자

■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사실이 이제는 2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으로 공장별 에너지 이용효율이 선진기업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기업이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

##### ① 대형화·다각화 경쟁

■ 국내 경쟁업체간의 매출·시장점유율 경쟁 등 대형화·다각화 경쟁과 선단식 경영을 지양해야 하며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 등 국내 기업간 특정시장·업종 등에서 「제살까기식 경쟁」도 지양해야 한다.

##### ② 경영자 아닌 주주의 무분별한 경영 여건

■ 주주가 경영에 무분별하게 관여하면 유한책임의 한계가 그만큼 확장되며, 주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경영관여는 「권한없는 경영관여」이다.

- ③ 무분별한 경영세습
  - 납세의무 이행후의 부의 상속은 인정되나, 무분별한 경영세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경영자가 선택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자 선출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 ④ 차입경영 관행
  - 빚은 독약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고수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차입경영에 따른 부실한 재무구조는 대외신뢰도를 저하시켜 양질의 직접금융 조달, 전략적 파트너의 발굴 등을 어렵게 한다.
- ⑤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상품 값 깎아주기」
  - 환율상승(원가가치 하락)시 값을 깎아주고 환율하락시 값을 올려받지 못해서는 곤란하며
  -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환율변동의 이익을 수출상대방이 아닌 우리 수출기업이 차지해야 한다.

## II. 신 산업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 1. 신 산업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 (1) 3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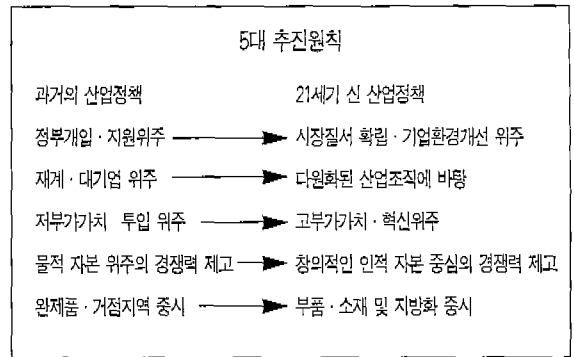
- ① 「동태적·선도적 경쟁력」의 확보
  - 유연하면서도 깊이 있는 지식기반과 창의적 인적자본에 바탕을 둔 경쟁력 기반을 구축
  - 정태적 경쟁력 뿐 아니라 디지털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동태적
  - 선도적 경쟁력을 확보
  - 이를 통해 안정적·지속적 성장 및 양질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풍요로운 삶 구현
- ② 「역동적·안정적 산업구조」 구축
  - 「초일류 대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의 「3각형 산업구조」로 개편
  -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성장의 동인으로 하는 균형

#### 되고 건전한 산업구조 구축

- 이를 통해 새로운 유망산업의 지속적 발굴과 창조적 혁신이 항구화되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확보
- ③ 「조화로운 시장경제」의 달성
- 창의적 기업가, 지식근로자, 참여적 소비자가 주도하는 조화로운 시장공동체 구현
  - 경쟁과 협력이 중시되는 조화로운 산업사회 및 문화형성
  - 이를 통해 경제주체의 참여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

#### (2) 5대 추진원칙

산업정책의 틀을 21세기의 정책수요에 적합하도록 과감히 전환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



### 2. 우리 산업의 3대 당면 문제점

- (1) 장치산업·양적성장 위주의 경직적 산업구조
- (2) 완제품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한 결과 조립가공형 사업구조가 고착되어 부품·소재 산업이 크게 취약
- (3)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 3. 당면정책과제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① 우리 산업

## 정책

의 당면한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과 ② 21세기 경제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5대 당면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전략적인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 (1) 기본전략

『중·소 벤처기업 육성대책』(8.27발표)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대등관계 정립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한다.

#### ① 창업 부문

기존기업 중심→신규창업 확대

■ 대학의 창업교육 기능 강화(단기강좌→중기강좌 신설)

■ 대학·연구소의 창업·기술보육기능 강화(창업보육센터 등)

■ 쉽고 투명한 창업절차의 확립(민원자동승인제도 도입 등)

#### ② 벤처기업 부문

융자위주 지원→투자위주 지원

■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투자펀드 등 투자기반 확대

■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감면 등 전략적 자본제휴 유도

■ 나스닥(NASDAQ) 진출 지원 등 국제화 추진

#### ③ 일반중소기업 부문

보호·지원 위주→자생력 위주

■ 기술력 향상(기술개발자금 확충, 첨단기술의 이전 촉진)

■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안정(공공기관 구매비중 확대 등)

#### ■ 대기업과의 수평적 협력 강화

#### (2)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수평적 대등관계 구축

#### ① 자금 : 대기업에 대한 자금의존 굴레로부터 탈피

□ 공정한 시장거래질서의 확립

■ 어음결제기간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무작위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공정거래위, 중기청협조)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기술담보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술평가기능을 제고하여 기술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

■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하여 기술력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와 보증요율을 차등화

□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의 적극 강구

■ 중소기업의 무보증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제도의 도입을 추진

■ 코스닥시장의 수급기반을 확충하여 우량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채널을 강화

#### ② 기술 : 독자 기술력 확보기반 구축

□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선별적이고 생산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

■ 분산·불충분 지원→전략과제 중심 집중·충분 지원

■ 연구기관 경유 간접지원 → 기업·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직접 지원

□ 기술이전 및 거래 등 기술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

■ 대학·연구소내 보유기술 D/B 구축, 특히관련 절차대행 등 기술이전 전담창구인 『기술이전센터』의 설립을 유도

■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배양을 위한 종합계획인 「기술력향상 5개년 계획(2001~

2005)을 수립

- 국제적인 기술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Agent」제도 도입
  - 해외동포 과학자, 다국적기업 경력 임원 등을 중소기업 「기술거래 Agent」로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해외판매 및 해외 첨단기술의 도입을 촉진
- 기술개발 자금과 사업화 자금간의 연계지원을 강화
-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 및 생산자금을 연계지원하여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기술개발자금 : 산업기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 등
  - 시제품개발·생산자금 : 자본재시제품 개발자금, 구조개선자금 등
- ③ 판로·수출 : 취약한 시장개척력 보완
-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판로를 확대
- 인터넷 중소기업관, 인터넷 사이버몰 등 「사이버 시장」을 확대 하기 위해 유명 인터넷망과의 제휴를 추진
- 향후 기술제품 박람회, 기술거래시장 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시현함으로써 공간적·시간적 판로 개척비용을 절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강화
- KOTRA를 중소기업 수출지원전담기구로 개편
  - 특히, 뉴욕, 싱가포르, 런던 등 주요 도시(20개)의 KOTRA 무역관에 수출전진기지인 「벤처기업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
- 업종별 전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력을 확충
- 중소기업의 공동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 또는 현지판

매법인을 설치하는 경우 「협동화 사업」으로 인정하여 구조개선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의 취약한 마케팅 기획능력을 제고
- 문화, 예술,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상품기획력 배양을 적극 지원
  -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업가와의 상시 만남의 장 개설 등
-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해외사무소별로 지역별 전략품목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마케팅 기획정보를 수집·제공

## ②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1) 부품·소재업체의 전문화·대형화·국제화 유도
  - 부품·소재업체들간의 M&A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강화
  - M&A에 따른 유후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기간 연장 (현행 99년말 → 2000년 6월말) 및 시설개체비 지원
  - Global Sourcing 대응능력의 향상을 적극 지원
  - 자동차·전자 등 핵심 부문의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 Global Sourcing에 적극 대응·금년 중 자동차, 전자분야에 대해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파급효과가 큰 철강·조선 분야 등으로 확대
  - 해외 품질인증 획득 활동을 적극 지원
    - CE, UL, QS-9000 등 해외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2) 차세대 핵심부품·소재의 전략적인 개발 지원
  -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을 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현행 분산지원방식을 집중지원방식으로 전환)
  - 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별로 1~2개씩 핵심부품·소재를 사업화까지 책임개발하는 「핵심부품·소재 책임개발제도」를 시행

## 정책

- 핵심분야별 부품·소재 기술혁신센터(TIC) 및 신뢰성평가 센터 설치
- 금년 중 설치예정인 14개 TIC를 부품·소재 분야에 집중, 「기계류부품 신뢰성 평가센터」를 조기 설립(당초 2003→2001)
- (3) 조립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간의 공정한 협력 기반 조성
- 조립대기업과 부품업체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 부품·소재관련 단체들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어음결제 관행 등 거래조건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정조치 강구
- 부품·소재업체들의 수탁 기업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
- 모범 수탁 기업체 협의회를 선정하여 협의회 공동사업을 적극 지원
- ◇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 금년말까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 ◇ 금년중 「부품·소재 투자사절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엔고 하에서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일본의 부품·소재업체 등 선진업체의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

### ③ 사업구조조정 of 조속한 마무리

#### (1) 평가

- 과잉·중복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
- 현대 : 석유화학·철도차량·발전설비·항공기 등 4개 부문
- 삼성 : 석유화학·항공기·자동차·발전설비·선박용엔진 등 5개 부문
- 대우 : 철도차량·항공기·전자 등 3개 부문

-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
- 생산제품의 다양화 및 차세대 제품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 등을 통해 투자와 판매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특히, 기술개발 역량의 통합, 과당경쟁 지양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

- 중복투자 매각, 출자전환,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

#### (2) 향후 추진방향

- 재무구조 개선과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해 추진중인 외자유치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노력
- 잉여설비의 해소와 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④ 효율적인 기술혁신체계의 구축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융합화, 기술개발 위험 및 투자규모의 대형화 등 기술개발여건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기술혁신체계(Technology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기술평가·거래시스템 구축 기술인력의 중점 육성, 우수 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 대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 (1)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산업기술 발전의 비전 정립 및 기술개발의 전략성 강화
- 중장기 산업기술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0~2004)」수립
- 기술개발 프로그램별 전략성을 강화
  - 산업구조, 기술특성을 기초로 통신, 반도체·전자부품, 생물, 항공우주 등 15개 핵심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중점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

략을 채택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 등 개발 과제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운용기술이전촉진법

(2) 기술평가·거래시스템의 구축

- (가칭)「한국기술거래시스템」의 설립을 추진
- 분산된 기술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알선하고 공공 및 민간기술이 거래되는 공신력 있는 「기술 거래의 장」을 마련
- 정부·민간이 공동 출연하여 민간전문경영기법이 접목된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육성
-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정립
- 기술평가가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한국기술거래시스템」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중점 육성
- 중장기적으로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유도

(3) 기술인력의 중점 육성

-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제도에 적극 반영
-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대학(원) 정원조정 및 직업훈련대상 조정에 반영
-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한국공학한림원 등 민간 주도로 추진
- 산업대학에도 산업체 현장과 연계된 전문박사학위과정 개설 인정 추진
- 첨단 및 기반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확대
- 반도체설계인력 등 산업계 수요가 시급한 인력을 중점 양성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공업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여 산업 현장 친화적인 전문기술인력을 대량으로 양성(연간 1,600여명)

(4)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촉진을 위해 「특허사업화 협의회」를 구성·운영(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및 지원기관 참여)

- 특허기술의 사업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애로요인의 해소와 자금지원, 거래알선 등을 통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종합지원

- 우수특허기술의 창출과 활용기반강화를 위한 특허 인프라 구축

- 특허기술 발전추이를 분야별로 정리·분석한 「특허지도」를 작성

- 특허기술 D/B 구축 등을 통해 특허기술정보의 유통을 촉진

(5) 대학의 기술개발활동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대학기술인력 활용의 극대화

- 지역 산학연 기술자원의 결집체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

- 대학과 산업계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예산 : (99) 400억원 →(2000안) 490억원

- 전체 R&D 지출의 3/4을 기업이 지출하는 반면, 박사급이상 고급 기술인력의 3/4이 대학에 집중

- 전국의 주요 대학을 지역기술혁신센터(TIC)로 지정하여 기술확산거점으로 활용(현재 6개의 TIC를 99년중 20개로 확대)

- 대학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계 이전 활성화

- 대학의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대학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를 적극 권장

- 대학의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수입의 적정 배분, 연구자 평가시 기술이전 실적 반영 등 산업화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책

### 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 (1) 정책방향

- 최근의 고유가상황은 선진국형 에너지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호기이므로 차제에 혁신적 절약시책을 강구
- 이를 위하여, 에너지 가격제도를 혁신하여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에너지 절약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체계를 강구

#### (2) 에너지가격제도의 개편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과감하게 전환
- 적정 공급원가를 반영하는 가격구조로 전환
- 중장기적으로 OECD유럽국가 등 선진국형 가격체계로 이행
- 두 차례의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종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에너지가격 개선방안」을 마련
- 2002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여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하여 에너지소비절약 및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

#### (3)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신에너지프론티어(NEF : New Energy Frontier) 프로그램을 추진
- 가격제도 개선에 따른 가격인상분의 일부를 절약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환원프로그램 추진
  - 기업, 수송, 건물부문 등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 \* 기업부문 : 자발적협약(VA) 참여자에 저리융자 및 세제지원
  - 참여업체수 : (99)28→(2001)190개(3만 TOE이상)
  - 절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속상각 등 추진

\* 수송부문 : 자동차에 대한 최저효율 기준제도 적용(2002년)을 통해 고효율 승용차 보급 촉진

- \* 건물부문 : 건물 고효율기기 설치시 저리 융자
- 에너지절약설비 및 기기제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를 강화
- 최우수 제조업체(Top Runner) 집중지원, 성공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등 고효율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공동주택 ESCO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의 확산 지원

## III. 맺음말

앞으로의 2~3년은 97년 외환위기 발발시점보다 더 중요한 시기로서 자만을 경계하고 국가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체계와 승자의 요건이 지배하는 21세기에 생존·번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제의 낡은 사고방식과 관행」을 버리고 지식·기술·정보 등 새로운 경쟁력의 요건을 하루빨리 갖춰야 하며,

둘째, 지속적인 자기개혁(Constant Self-transformation)을 통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과 변신(Adapt Quickly, Adapt Constantly)을 촉구해야 한다.

정부도 혁신적 기업과 창의적 기업인이 국부창출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